

청년고용과 소득불평등(빈곤)

반 정 호*

I. 머리말

이 글은 「노동리뷰」 10월호에 수록된 「청년층 고용상황과 소득수준의 변화」라는 글에 이어 청년고용과 소득불평등(빈곤)이 연관되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난호에서는 가구단위의 미시자료의 성격을 갖고 있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활용한 코호트 분석을 통해 청년기 고용불안은 초기 청년기에 경험되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후기 청년기 혹은 장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년층의 고용불안은 이들 가구가 획득하는 소득수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에서는 청년층 연령별(5세구간) * 고용형태별 코호트의 소득불평등과 빈곤수준을 비교해 본다. 분석기간은 분석코호트들의 장기간 추세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1988~2008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설정하였고, 동시에 두 시기 동안의 코호트 비교가 가능하도록 1987~97년과 1998~2008년으로 기간을 분리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엔트로피(Generalized Entropy) 요인분해를 통해 20·30대 청년가구의 고용불안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고자 하였다. GE계열의 요인분해는 소득원천별로 전체 불평등에 기여하는 수준을 정태적 혹은 동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러한 요인분해를 통해 청년가구가 노동시장을 통해 확보한 근로소득이 전체 가구의 소득불평등에 기여하는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jhban@kli.re.kr).

II. 청년층의 고용상황과 소득불평등(빈곤) 수준¹⁾

청년층 코호트별로 소득불평등 및 상대빈곤율 현황과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자. 1988~2008년까지 장기간의 연령별*고용형태별 코호트의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고용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청년층에서 장년기 이후까지 불평등도가 낮게 유지되고 있는 반면, 상용·노무직 및 임시·일용직과 같은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계층에서는 지니계수가 높게 나타나 근로소득 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나타난다.

20-24세 사무·전문직은 1998년 0.326으로 상용·노무직이나 임시·일용직에 비해 근로소득 불평등도가 가장 높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3년 0.245까지 낮아졌고, 이후 이들이 40-44세가 되는 2008년 시점에서는 0.272로 지니계수가 소폭 증가했다. 반면 상용·노무직의 경우는 1998년 0.282에서 2008년 0.315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²⁾ 임시·일용직의 경우는 1998년 0.309에서 외환위기 시점인 1998년에 0.403까지 소득불평등이 확대되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이들이 40-44세가 되는 2008년에는 0.291 수준까지 낮아졌으나 다른 고용형태에 비해 여전히 불평등도가 높다.

25-29세 연령코호트에서는 사무·전문직의 경우에 1988년 0.322 수준이던 지니계수가 이들이 중년기에 해당되는 1993년(25-29세)과 1998년(40-44세)까지 지니계수는 0.240, 0.229까지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45-49세가 되는 2008년에는 0.254까지 다시 증가한다. 상용·노무직의 경우는 1988년 0.259에서 이들이 초기 중년기에 접어드는 30-34세(1993년) 시점에서 지니계수는 0.243까지 하락하지만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이들이 45-49세가 되는 2008년 시점에서는 0.310까지 불평등이 확대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임시·일용직에서도 비슷하게 경험되는데 임시·일용직 가구의 1988년 기준 지니계수는 0.354에서 30-34세(1993년) 시점에서 0.268까지 하락하지만 이들이 40-44세가 되는 시점인 2003년과 45-49세에 해당하는 2008년에 각각 0.326, 0.310 수준의

- 1) 이 글에서 소득불평등과 빈곤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한 분석지표는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이다. 지니계수는 소득 순으로 인구의 누적분포와 소득누적비율의 로렌즈곡선을 이용하여 소득분배균등선(45°선)과 로렌즈곡선 사이의 면적비율로 구해지며,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고 1에 가까울수록 분배가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또한 상대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중으로 정의된다.
- 2) 전문·사무직은 관공서 또는 국·공립병원 및 개인회사, 공장, 학교 등에 고용되어 주로 정신적, 기술적, 관리적인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며, 상용·노무직은 관공서 또는 개인기업체(상점 포함)에 고용되어 주로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는 자, 임시·일용직은 관공서 또는 개인기업체(상점 포함)에 30일 미만의 기간 또는 매일매일 계약에 의하여 주로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표 1> 청년층 코호트별(연령*고용형태) 지니계수 변화: 1988~2008년

		1988	1993	1998	2003	2008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cohort 1	20-24세*사무/전문직	0.326	0.253	0.247	0.245	0.272
cohort 2	20-24세*상용/노무직	0.282	0.244	0.267	0.274	0.315
cohort 3	20-24세*임시/일용직	0.309	0.280	0.403	0.311	0.291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cohort 4	25-29세*사무/전문직	0.322	0.240	0.229	0.241	0.254
cohort 5	25-29세*상용/노무직	0.259	0.243	0.282	0.292	0.310
cohort 6	25-29세*임시/일용직	0.354	0.268	0.348	0.326	0.310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cohort 7	30-34세*사무/전문직	0.294	0.231	0.238	0.258	0.281
cohort 8	30-34세*상용/노무직	0.263	0.242	0.293	0.301	0.353
cohort 9	30-34세*임시/일용직	0.358	0.352	0.362	0.279	0.339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cohort 10	35-39세*사무/전문직	0.289	0.220	0.261	0.226	0.295
cohort 11	35-39세*상용/노무직	0.289	0.265	0.294	0.306	0.323
cohort 12	35-39세*임시/일용직	0.392	0.290	0.350	0.302	0.305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지니계수를 기록한다. 즉 고용형태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계층에서 근로소득 불평등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동시에 중년기에 불평등이 심화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청년층 코호트별 상대빈곤율(가구 경상소득 기준) 수준을 살펴보기로 하자. 35-39세의 연령코호트를 제외하면 사무·전문직 가구의 빈곤위험이 가장 낮은 집단으로 분석되고 있고, 임시·일용직 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높다. 사무·전문직의 경우 초기 청년기(20-24세) 빈곤율이 9.1%로 비교적 높았다가 이후 35-39세가 되는 2003년에 5.1%까지 감소하고, 40-44세 시점(2008년)에서 상대빈곤율이 7.4%로 소폭 증가한다. 상용·노무직에 종사하는 청년층의 1988년 가구의 경상소득 기준은 6.2%의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10.1%까지 증가했다.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는 청년층의 경우 1988년 빈곤율은 35.7%에서 이들이 30-34세가 되는 1998년에 19.4%, 40-44세가 되는 2008년에 10.2%까지 빈곤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다른 고용형태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높은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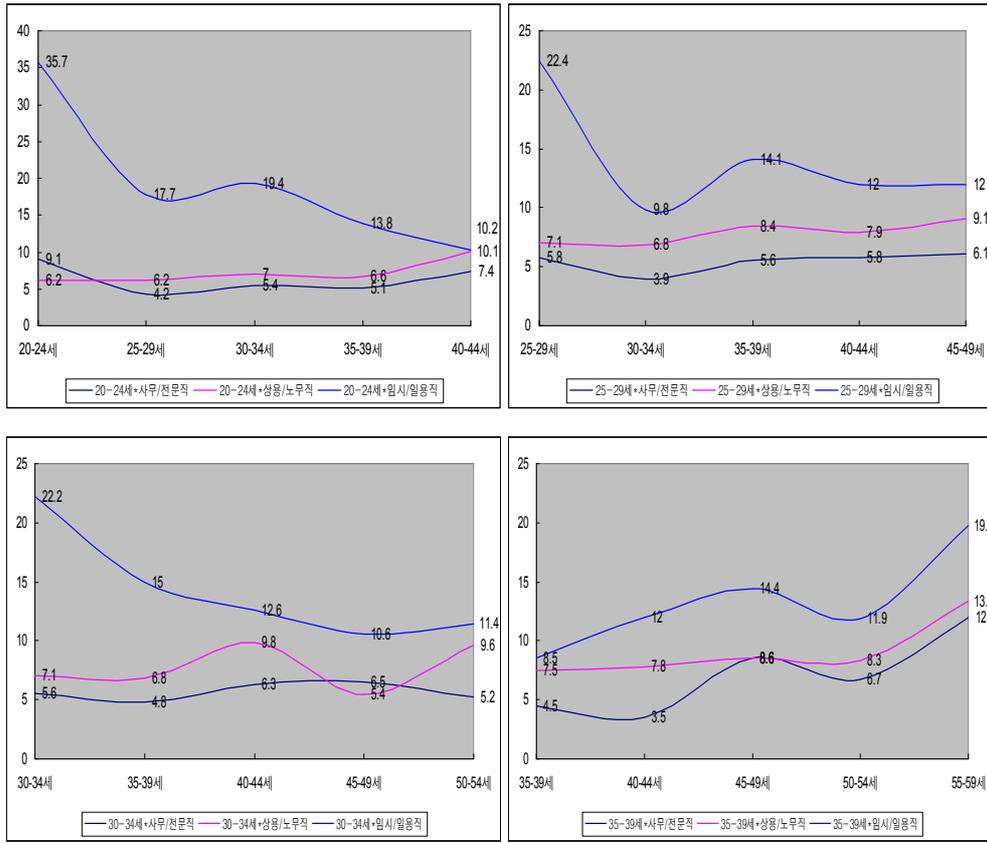
〈표 2〉 청년층 코호트별(연령*고용형태) 상대빈곤율 변화:1988~2008년

		1988	1993	1998	2003	2008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cohort 1	20-24세*사무/전문직	9.1	4.2	5.4	5.1	7.4
cohort 2	20-24세*상용/노무직	6.2	6.2	7.0	6.6	10.1
cohort 3	20-24세*임시/일용직	35.7	17.7	19.4	13.8	10.2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cohort 4	25-29세*사무/전문직	5.8	3.9	5.6	5.8	6.1
cohort 5	25-29세*상용/노무직	7.1	6.8	8.4	7.9	9.1
cohort 6	25-29세*임시/일용직	22.4	9.8	14.1	12.0	12.0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cohort 7	30-34세*사무/전문직	5.6	4.8	6.3	6.5	5.2
cohort 8	30-34세*상용/노무직	7.1	6.8	9.8	5.4	9.6
cohort 9	30-34세*임시/일용직	22.2	15.0	12.6	10.6	11.4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cohort 10	35-39세*사무/전문직	4.5	3.5	8.6	6.7	12.0
cohort 11	35-39세*상용/노무직	7.5	7.8	8.6	8.3	13.4
cohort 12	35-39세*임시/일용직	8.5	12.0	14.4	11.9	19.8

25-29세 후기 청년층의 고용형태별 빈곤율을 살펴보면, 사무·전문직 및 상용·노무직 가구의 상대빈곤율은 장년기를 지나면서도 큰 변화가 없거나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임시·일용직 가구의 경우는 1988년 22.4%의 높은 빈곤율을 보이다가 중년기로 접어들면서 10% 중반대로 떨어지고 있지만 역시 다른 고용형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율을 기록한다.

30-34세 연령층의 경우, 사무·전문직 가구에서는 빈곤율의 큰 변화 없이 5%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용·노무직의 경우는 1988년 7.1%에서 2008년 9.6%까지 증가한다. 35-39세 연령층의 경우는 대부분의 고용형태에서 상대빈곤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사무·전문직의 경우는 1988년 4.5%에서 이들이 55-59세가 되는 2008년 12.0%까지 증가하고 상용·노무직 가구에서도 같은 기간 7.5%에서 13.4%까지 증가한다. 임시·일용직 가구는 1988년 18.5%에서 이들이 50-54세가 되는 시점인 2003년에 11.9%까지 하락하지만 2008년 19.8%까지 크게 증가해 1988년보다 1.3%p 높은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 1] 청년층 코호트별(연령*고용형태) 상대빈곤율 변화: 1988~2008년



<표 3>과 <표 4>에서는 청년층 코호트별 소득불평등과 빈곤율의 변화를 외환위기 이전 10년(1987~97년)과 이후 10년(1998~2008년)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우선 외환위기 이전 10년 동안은 각 코호트별로 대부분의 고용형태에서 근로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개선되거나 혹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근로소득 불평등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던 시기였음을 보여준다. 코호트 3(20-24세, 임시·일용직)과 코호트 9(30-34세, 임시·일용직), 코호트 11(34-39세, 상용·노무직)을 제외한 나머지 코호트에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소득 분배가 보다 균등해지고 있었으며, 특히 사무·전문직의 소득불평등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해당가구의 빈곤위험도 대체적으로 낮아지고 있거나 빈곤율의 두드러진 변화가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 기간에 빈곤위험이 현저하게 높아진 코호트는 30-34세 및 35-39세 사무·전문직 가구 2개 코호트에서이다.

〈표 3〉 청년층 코호트별(연령*고용형태) 지니계수 변화: 1987~97년 및 1998~2008년 비교

		1987	1992	1997	1998	2003	2008
		20-24세	25-29세	30-34세	20-24세	25-29세	30-34세
cohort 1	20-24세*사무/전문직	0.310	0.249	0.233	0.266	0.282	0.241
cohort 2	20-24세*상용/노무직	0.254	0.239	0.238	0.234	0.260	0.251
cohort 3	20-24세*임시/일용직	0.328	0.317	0.338	0.240	0.298	0.264
		25-29세	30-34세	35-39세	25-29세	30-34세	35-39세
cohort 4	25-29세*사무/전문직	0.267	0.238	0.225	0.240	0.243	0.251
cohort 5	25-29세*상용/노무직	0.235	0.244	0.241	0.263	0.261	0.257
cohort 6	25-29세*임시/일용직	0.321	0.309	0.280	0.348	0.314	0.314
		30-34세	35-39세	40-44세	30-34세	35-39세	40-44세
cohort 7	30-34세*사무/전문직	0.263	0.222	0.236	0.247	0.245	0.272
cohort 8	30-34세*상용/노무직	0.238	0.247	0.238	0.267	0.274	0.315
cohort 9	30-34세*임시/일용직	0.330	0.348	0.332	0.403	0.311	0.291
		35-39세	40-44세	45-49세	35-39세	40-44세	45-49세
cohort 10	35-39세*사무/전문직	0.263	0.254	0.240	0.229	0.241	0.254
cohort 11	35-39세*상용/노무직	0.285	0.276	0.286	0.282	0.292	0.310
cohort 12	35-39세*임시/일용직	0.365	0.339	0.317	0.348	0.326	0.310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에는 이전 10년 동안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20-24세 코호트에서는 사무·전문직을 제외한 상용·노무직 및 임시·일용직의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었으며, 25-29세 코호트에서는 사무·전문직에서, 30-34세 및 35-39세 코호트에서는 사무·전문직과 상용·노무직 가구에서 모두 근로소득 분배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빈곤율의 경우를 살펴보면, 25-29세와 30-34세 임시·일용직 코호트에서의 빈곤율이 크게 완화된 것을 제외하면 빈곤율의 큰 변화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25-29세 사무·전문직, 30-34세 및 35-39세 코호트의 사무·전문직 및 상용·노무직 가구에서 빈곤율이 증가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 청년층이 노동시장을 통해 획득한 근로소득의 불평등도는 위기 이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불평등이 완화된 코호트에서도 과거보다 완화수준이 낮아졌다.

<표 4> 청년층 코호트별(연령*고용형태) 상대빈곤율 변화: 1987-97년 및 1998~2008년 비교

		1987	1992	1997	1998	2003	2008
		20-24세	25-29세	30-34세	20-24세	25-29세	30-34세
cohort 1	20-24세*사무/전문직	7.6	4.7	4.9	7.5	10.6	5.5
cohort 2	20-24세*상용/노무직	6.2	5.5	5.9	6.9	9.4	4.1
cohort 3	20-24세*임시/일용직	20.5	12.2	14.0	13.9	14.1	11.3
		25-29세	30-34세	35-39세	25-29세	30-34세	35-39세
cohort 4	25-29세*사무/전문직	4.9	4.5	4.1	6.3	4.8	7.1
cohort 5	25-29세*상용/노무직	6.0	7.1	7.5	7.3	8.1	6.1
cohort 6	25-29세*임시/일용직	12.0	15.4	10.4	25.6	16.0	9.7
		30-34세	35-39세	40-44세	30-34세	35-39세	40-44세
cohort 7	30-34세*사무/전문직	4.9	3.9	7.1	5.4	5.1	7.4
cohort 8	30-34세*상용/노무직	7.3	7.3	7.9	7.0	6.6	10.1
cohort 9	30-34세*임시/일용직	14.0	16.6	15.2	19.4	13.8	10.2
		35-39세	40-44세	45-49세	35-39세	40-44세	45-49세
cohort 10	35-39세*사무/전문직	3.8	3.2	6.8	5.6	5.8	6.1
cohort 11	35-39세*상용/노무직	9.0	8.8	8.6	8.4	7.9	9.1
cohort 12	35-39세*임시/일용직	15.1	13.1	11.7	14.1	12.0	12.0

III. 청년가구의 소득불평등 요인분해: 일반적인 엔트로피(Generalized Entropy) 분해

지난호에 수록된 글에서 분석의 주요 특징은 청년층의 가구소득 및 본인의 근로소득이 외환위기 이전 시점(1987~97년)에 비해 최근 10여년(1998~2008년) 동안에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울러 고용이 불안정한 계층일수록 절대적 소득규모가 작고, 고용형태 간 근로소득의 격차도 상당히 커지고 있었다. 즉 청년층 고용상황과 가구소득의 관계가 더욱 긴요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청년가구의 소득원천별 불평등 기여도에 대한 요인분해를 통해 이를 실증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요인분해는 20-30대 청년가구의 소득원천별 불평등이 전체 소득불평등에 기여하는 수준을 GE(2)³⁾ 계열의 엔트로피 지수분해를 통해 이루어진다. 소득불평등에 대한 요인분해는 어느 한 시점에서 소득불평등도 수준을 정태적으로 분해할 수 있을 뿐만 아

나라 일정기간 동안의 소득불평등도 변화를 동태적으로 분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소득원천별로 당해 연도의 전체 가구소득 불평등에 기여하는 수준을 분석함과 동시에 분석시점을 나누어 과거에 비해 소득원천별 불평등 기여도가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요인분해를 위해 활용한 지표는 Shorrocks(1982)와 Jenkins(1995)가 제안한 변이계수자승의 1/2값인 GE(2)를 불평등 지표로 활용한다.⁴⁾ GE(2)계열의 요인분해는 분해의 대상이 되는 전체 소득이 몇 가지의 소득원천의 합으로 나타날 경우, 각 소득원천 y_f 의 불평등을 $GE(2)_f$, y_f 가 전체 소득불평등에 미친 상대적 기여도를 s_f 라 하면 s_f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s_f = \frac{GE(2)_f}{GE(2)}$$

또한 y_f 의 전체 소득의 불평등 GE(2)에 대한 절대적 기여도 S_f 는 $S_f = s_f GE(2)$ 로 표현되며, Jenkins(1995)의 방법에 따라 S_f 는 아래와 같이 다시 정의된다.

$$S_f = s_f GE(2) = \rho_f \chi_f \sqrt{GE(2) \cdot GE(2)_f}$$

여기에서 ρ_f 는 소득원천 y_f 와 전체 소득 y 의 상관계수를 나타내며, χ_f 는 소득원천 y_f 의 평균과 전체 소득 y 에 대한 비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전체 불평등도에 대한 개별 소득원천의 기여도를 동태적으로 분해하기 위해 GE(2)지수를 시간에 대해 차분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Delta GE(2) = GE(2)_{t-1} - GE(2)_t = \sum_f \Delta S_f = \sum_f \Delta (\rho_f \chi_f \sqrt{GE(2) GE(2)_f})$$

이를 백분율 변화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이 상대적 기여도(s_f)가 도출된다.

$$\Delta GE(2)/GE(2) = \sum_f s_f \Delta S_f / S_f$$

<표 5>와 <표 6>은 20·30대 청년층 가구의 1987~97년 및 1998~2008년 두 기간 동안

-
- 3) 일반적인 엔트로피 지수(GE(2))는 $GE(2) = \frac{\sum_i (\mu - Y_i)^2}{2n\mu^2}$ 으로 정의되며, 소득이 완전히 균등하게 분배 되었을 경우, 개별가구의 Y_i 는 평균소득 μ 와 같아지므로 GE(2)는 0이 되며, 소득분배가 불평등할 경우 그 값은 커지게 된다.
 - 4) GE(2)지수 요인분해 방법은 정진호 외(2002)를 많이 참고하였다. 소득원천별 불평등 요인분해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유진 외(2005), 이병희·강신욱 외(2007) 등의 연구를 참조.

<표 5> 소득원천별 불평등 요인분해: 정태적 요인분해(1987년, 1997년)

		평균소득	상관계수(ρ_f)	GE(2)=scv/2	절대적 기여도(S)	상대적 기여도(s)
1987	경상소득	256,616		0.67333	0.67333	100.0
	가구주 근로소득	205,728	0.802	0.67508	0.43360	64.4
	배우자 근로소득	12,827	0.050	25.14874	0.07519	11.2
	기타가구원 근로소득	16,076	0.063	15.97165	0.04675	6.9
	사업소득	7,088	0.028	34.30766	0.02313	3.4
	재산소득	7,434	0.029	34.46264	0.03517	5.2
	공적이전	628	0.002	1143.13090	0.00568	0.8
	사적이전	6,840	0.027	83.40126	0.05380	8.0
1997	경상소득	1,044,847		0.37196	0.37196	100.0
	가구주 근로소득	805,166	0.771	0.28821	0.16733	45.0
	배우자 근로소득	106,501	0.102	6.49341	0.06799	18.3
	기타가구원 근로소득	45,086	0.043	16.10746	0.01758	4.7
	사업소득	37,890	0.036	19.10269	0.01971	5.3
	재산소득	14,638	0.014	26.91628	0.00538	1.4
	공적이전	4,152	0.004	152.71838	0.00128	0.3
	사적이전	31,414	0.030	107.77105	0.09269	24.9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의 소득원천별 불평등도를 정태적으로 분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에 활용된 소득변수는 경상소득으로 이는 가구주 근로소득(가구주+가구주의 배우자+기타가구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공·사적이전소득)의 합으로 구성된다. 먼저 1987년과 1997년 두 시점의 정태적 요인분해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1987년의 경우 20·30대 청년층 가구의 경상소득 기준 불평등 수준(GE(2))은 0.6733으로 나타나고 해당 가구의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재산소득 순으로 불평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개별 소득원천별로 전체 소득불평등에 절대적으로 기여하는 수준은 근로소득,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적이전소득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 기간 20·30대 청년층 가구의 소득불평등은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약 64.4%를 설명하고,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11.2%, 사적이전소득이 약 8.0%를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1997년의 경우에는 경상소득 기준 불평등이 0.3720 수준으로 1987년에 비해 대폭 완화되고 있다. 전체 불평등에 대한 소득원천별 절대적 기여도도 근로소득이 0.1673 수준으로 낮아지고 배우자의 근로소득도 0.0680 수준으로 1987년에 비해 낮아지고 있다. 전체 소득불평등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를 살펴보면, 청년층 가구주 근로소득은 전체 소득불평등을 약 45.0%, 사적이전소득이 약 24.9%,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18.3%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1987년에 비해 가구주 근로소득의 기여도는 대폭 감소했으며, 배우자 근로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은 전체 불평등에 기여하는 수준이 증가했다.

1998년과 2008년의 소득원천별 불평등을 요인분해하면 <표 6>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경상소득 기준 GE(2)지수가 0.3745에서 0.8783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30대

<표 6> 소득원천별 불평등 요인분해: 정태적 요인분해(1998, 2008년)

		평균	상관계수 (ρ_f)	GE(2)=scv/2	절대적 기여도(s)	상대적 기여도(s)
1998	경상소득	977,934		0.37445	0.37448	100.0
	가구주 근로소득	773,385	0.729	0.31875	0.19913	53.2
	배우자 근로소득	90,055	0.453	7.55249	0.07011	18.7
	기타가구원 근로소득	45,588	0.158	13.75397	0.01673	4.5
	사업소득	29,042	0.160	18.27957	0.01242	3.3
	재산소득	11,753	0.153	50.14475	0.00798	2.1
	공적이전	4,424	0.109	305.75559	0.00526	1.4
	사적이전	23,688	0.407	108.40921	0.06285	16.8
2008	경상소득	1,922,635		0.87829	0.87829	100.0
	가구주 근로소득	1,482,042	0.813	0.88658	0.55313	63.0
	배우자 근로소득	266,268	0.584	11.90482	0.26152	29.8
	기타가구원 근로소득	53,564	0.083	52.42204	0.01576	1.8
	사업소득	33,719	0.105	81.87362	0.01555	1.8
	재산소득	12,090	0.153	144.24841	0.01084	1.2
	공적이전	32,590	0.036	38.62366	0.00357	0.4
	사적이전	42,361	0.107	65.96642	0.01792	2.0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청년층 가구의 소득원천이 전체 불평등에 절대적으로 기여하는 수준을 살펴보면, 1998년에는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배우자 근로소득, 사적이전소득, 기타가구원 근로소득 순으로 높다. 상대적 기여도를 살펴보면, 1998년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전체 불평등을 약 53.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배우자 근로소득(18.7%), 사적이전소득(16.8%), 기타가구원의 근로소득(4.5%) 순으로 높았으나 2008년에는 가구주 근로소득 및 배우자 근로소득의 기여도가 각각 63.0%, 29.8%로 높아지고 반대로 사적이전소득의 상대적 기여도는 2.0%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1987년과 1997년에는 청년층 가구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낮아지고 있고 청년가구주의 근로소득이 불평등에 기여하는 수준도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1998년과 2008년에는 소득불평등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청년 가구주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전체 가구의 소득불평등에 기여하는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두 기간 동안의 불평등 변화에 개별 소득원천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다음에 설명할 동태적 요인분해 결과에서 기술하도록 한다.

<표 7>은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10년 동안의 청년층 가구의 소득불평등 변화에 개별 소득원천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동태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1987~97년 동안 청년층 가구의 경상소득 기준 소득불평등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가구주의 근로소득 불평등도 변화가 전체 가구소득 불평등 변화에 미친 기여율이 -39.5%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또한 이 기간에는 사적이전소득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소득원천에서 불

<표 7> 소득원천별 불평등 요인분해: 동태적 요인분해

	1987 ~ 97		1998 ~ 2008	
	절대적 기여율	상대적 기여도	절대적 기여율	상대적 기여도
경상소득	-44.8	100.0	134.5	100.0
가구주 근로소득	-39.5	88.4	94.5	70.3
배우자 근로소득	-1.1	2.4	51.1	38.0
기타가구원 근로소득	-4.3	9.7	-0.3	-0.2
사업소득	-0.5	1.1	0.8	0.6
재산소득	-4.4	9.9	0.8	0.6
공적이전	-0.7	1.5	-0.4	-0.3
사적이전	5.8	-12.9	-12.0	-8.9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평등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1987~97년 사이 청년층의 소득불평등이 감소는 가구주 근로소득의 불평등 감소에 의해 약 88.4%가 설명되고 재산소득 및 기타가구원의 근로소득의 불평등 변화가 각각 9.9%, 9.7%를 설명하고 있다.

1998년과 2008년 사이에는 청년층 소득불평등이 증가했는데 가구주의 근로소득의 불평등 증가가 94.5%, 배우자 근로소득의 불평등 증가가 51.5%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의 불평등 증가에 의한 기여도는 매우 미약하고, 기타가구원의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의 불평등도 변화는 전체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 소득원천이 전체 불평등에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1998~2008년 불평등의 증가는 가구주의 근로소득 불평등 증가가 약 70.3%, 배우자의 근로소득 불평등 증가가 38.0%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 기간 청년 가구주 및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불평등 변화가 전체 가구의 소득불평등 증가를 대부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IV. 맺음말

경제구조 및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등 국내외 환경변화는 청년층의 고용사정을 전반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청년층 고용악화는 초기 청년기에 국한되어 나타나지 않고 장년기에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함께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청년층 고용상황은 해당 가구의 소득수준은 물론 불평등과 빈곤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20·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가구단위의 미시자료(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코호트 분석한 결과 고용이 불안정한 청년층일수록 근로소득의 절대적 소득규모가 작고,

고용형태간 소득격차도 상당히 커지고 있었다. 또한 가구소득 및 본인의 근로소득이 외환위기 이전 시점(1987~97년)에 비해 최근 10여년(1998~2008년) 동안에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고용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계층에서 소득 불평등도와 빈곤율이 가장 높게 났고, 특히 외환위기 이후 10년은 전반적으로 이전 10년에 비해 불평등이 확대되고 빈곤위험도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환위기 이전보다 이후 10년 동안을 청년기로 보내고 있는 세대들에서 고용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소득둔화와 분배악화가 경험되고 있고, 빈곤위험에의 노출위험도 높아졌다.

청년층의 소득원천별 불평등도를 요인분해하면 청년층의 고용과 소득불평등의 관계가 보다 명확해진다. 외환위기 이전 10년에 비해 최근 10년(1998~2008년) 동안에 20·30대 청년층 가구의 근로소득의 불평등 기여도가 크게 증가했다. 이는 청년층의 고용상태(지위)와 소득이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 동시에 고용상태에 기반한 근로소득의 불평등 확대가 전체 가구의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년층이 기존의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증진시키는 고용정책과 함께 청년층의 지속적인 숙련형성과 이에 따른 임금의 상향적 이동이 가능한 일자리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KLI**

<참고문헌>

- 여유진·김미곤·김태완·양시현·최현수(2005),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 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병희·강신욱 외(2007), 『최근 소득분배 및 공적이전·조세의 재분배 효과 추이 분석』,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 정진호·황덕순·이병희·최강식(200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Jenkins, S. P.(1995), “Accounting for Inequality Trends: Decomposition Analyses for the UK, 1971-86.” *Economica* 62(345), pp.29-63.
- Shorrocks, A. F.(1982), “Inequality Decomposition by Factor Components.” *Econometrica* 50(1), pp.193-211.